

[종합·해설]

이재오·안희정씨 정계개편 핵 등장



이재오 최고위원

李 최고위원 사퇴땀 일부 의원 탈당 할 듯 安 친노의원 교류... 8·15특사 포함 가능성

은 16일 선암사 부근 암자에서 혼자 참선을 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향후 진로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은 낮으며 백의중군을 명분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의 외연 넓히기에 나서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상당한 갈등과 반목을 겪을 전망이다. 우선 대선을 앞두고 '적전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당내 대권 주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친박(親朴·친 박근혜 전 대표)-친이(親李·친 이명박 전 시장)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세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 이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한나라당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 전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경선에서 대리전, 색깔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대선후보 경선은 어



안희정씨

떨지 우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표 측근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재오 최고위원의 "수구보수 지도부" 발언에 대해 "우리는 수구 보수가 아니다"라며 당 무복귀를 요구했다.

최근 친노 측근 의원들과 유류 각국을 방문, 대선 체제 및 외국 정당의 운영체제를 둘러보고 온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씨의 행보도 정치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가 추후 이뤄질 정계개편에 대비, 친노 의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안희정씨가 오는 8·15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해에도 여러 핵심부에서 안희정씨의 사면복권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광복절 특사에는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안희정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안희정씨는 친노 의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 여론에서 한나라당의 내분을 지켜보며 나름대로의 정계개편 구도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수구보수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명박 전 시장과 손학규 전 지사가 경선을 거부하고 밖으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내분이 심화되면 정계개편 방정식은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여권 핵심부에서 소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등을 감안, 다당제 구도로 차기 대선을 치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대통령 "미 대북제재 선참후계 연상" (先斬後啓·일단 처형하고 따짐) 한·미 극명한 시각차... 파장일 듯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청와대 민간 회동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관련, '선참후계(先斬後啓·일단 처형하고 따짐)'라는 고사성어를 빌려 대북문제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 미사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한미 관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언급, "북한이 달러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에 장부부터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선참후계란 말을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이라크 사태를 보면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단정해놓고 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오류와 피해를 야기했다"며 "노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만사가 편하지만, 이렇게 선참후계식으로 되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고민을 얘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강경 입장을 무조건 추수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선과 악의 대립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을 더욱 설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라고 본다"라고 말하며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되므로 그런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우피해 최소화 만전을"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재해대책본부를 방문,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과 전국의 집중호우 피해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 고개 든 개헌론

與 '불지피기' ... 한나라 "관심없다"

제58주년 제헌절을 맞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주변부에서 변죽만 울려온 개헌논의이지만 헌법 문제가 제조업을 받는 제헌절을 '모멘텀'으로 삼아 새롭게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여론을 중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해 조기 개헌논의를 적극 추동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재시동 가는 국회의장=현재 개헌 논의의 최대 동력은 임재정 국회의장이다. 지난달 19일 취임하자마자 "21세기 맞는 헌법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임 의장은 제헌절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의 한 측근은 "제헌절을 맞아 국회를 중심으로 한 헌법연구가 시급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 직속기구로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제안이 나올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여 '군불때기'=정치권 내에서도 개헌논의를 재촉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하다. 무엇보다도 여당이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난 14일 라디오방송에서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라며 4년 중임제만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주도하는 '헌법포럼'은 지난달 26일 학계인사들을 초청해 개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적극적이다.

▷한 '시큰둥'...공론화 미지수=이처럼 개헌논의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높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 여당의 적극적 태도와는 달리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개헌논의에 관심없다"며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유력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현재 정부 내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있다. 5·31 지방선거에 참패한 여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어 다시 짜야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유리한 대권고지를 선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에 응할지 망설인다. 분석이다.

▷정계개편 항행이 변수=그러나 개헌 논의의 언제, 어떤 식으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정국 최대의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실현가능성보다도 논의 자체가 정계개편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과 노선 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찬반입장을 기준으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도탄사령부 10월 창설

대북지원액 1조원 넘어

북 장시정포 등 대응

북한의 장시정포와 단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육군의 유도탄사령부가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군 구조개혁에 따라 새로 만들기로 했던 육군 유도탄사령부가 오는 9월~10월 사이 중부지역에 창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도탄사령부는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지대지 유도탄, 스커드미사일 등의 위협을 겨냥해 우리 군 포병의 핵심장비인 다연장로켓(MLRS)과 에이테킵스

(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자주포 등의 포병전력을 총괄지휘하게 된다.

앞으로 확보될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 일부도 정밀한 회색지능 능력 확보차원에서 유도탄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부지역에 사령부를 두게 된 것은 전술·전략적인 목적 때문"이라며 "최근 컴퓨터 등 사무장비 조달 업체가 선정됐고 사령부 편제도 대략 확정됐다"고 말했다.

유도탄사령부 사령관은 올해 10월 장군 정기인사 때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급 장성이 맡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전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1,413억원

정부가 올 상반기 북한에 지원한 물자가 금액면에서 1천413억 원어치로 작년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액 누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액은 통일부 반출승인 기준으로 1천413억5천만원(1억4천136만 달러)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올 들어 1조원을 돌파, 모두 1조5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가라!!

태진아 7월 20, 21일

혜은이 7월 26, 27일

부킹천국 100%

광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대지부동산
T.062-222-0050
011-627-3003

고온공인중개사
T.0621651-7666, 017-604-7744
전원동 고온이파트먼트 대표원

신바람부동산(주)
-토지전문-
(대)062-376-9777
(한)016-610-6046

태양열 발전소 부지

일조권 풍부한 정남향, 경사도 15도내외, 관리지역 가격 3~5만원

- ☞ 9,500평
- ☞ 10,000평
- ☞ 12,000평
- ☞ 15,000평
- ☞ 18,000평

전원주택사업자, 공장용도부지 상담요망

-중개업자 상담시절-
-사업자 직접 상담-

대지부동산

임야, 문중, 목장 전원주택 전문

- ▶ 남구 양파동 취락지구 전 420평 평당555만
- ▶ 화순 이왕 임야 10,000평 평당1215천원
- ▶ 화순을 삼천리 담 740평 25만
- ▶ 담양군 금성면 농공단지 공장 대지 5200평 건평 480평 매가 12억
- ▶ 능주면 내리 과수원 650평, 평당8만
- ▶ 북구 청옥동 대지 169평 당 60만
- ▶ 북구 청옥동 2차선대지 370평 당 60만
- ▶ 송학동 2차선전관리지역 518평 평당25만
- ▶ 화순 도곡면 산리리 전 1400평 평당12만 관리지역 전원주택적합
- ▶ 나주 청동 관리지역 1600평 가스충전소, 주유소, 식당적합 평당 50만
- ▶ 북구 망월동 담 530평 17만
- ▶ 동구 자산동 1,500평 35만 1중주거지역 고시원 적합
- ▶ 남구 화장동 1,000평 30만 1중주거지역
- ▶ 남구 화장동 담 800평 11만
- ▶ 남구 황석동 담 700평 13만
- ▶ 서구 용동 대지330평 평당45만
- ▶ 동구 내남동 전·임야 3,800평 평당5만
- ▶ 북구 충효동 대지134평 평당 60만 전원주택
- ▶ 동구 자산동 대지83평 평당 220만 2차선도로점 원룸·고시원적합

화순읍근교 전원주택지 다량보유